



제418회국회(정기회)
제3차 외교통일위원회

북한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 규탄 및 세계 평화를 위한 국제협력 촉구 결의안 검 토 보 고

■ 김 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4821호)

2024. 10.

외 교 통 일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송병철

목 차

I. 제안 및 회부	1
II. 주문 및 제안이유	1
III. 검토의견	6

I. 제안 및 회부

가. 제안자 : 김 건의원 등 16인

나. 제안일자 : 2024년 10월 22일

다. 회부일자 : 2024년 10월 23일

II. 주문 및 제안이유

주 문

대한민국 국회는 최근 북한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이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위협인 동시에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불법행위라고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10월 18일 우리 정보당국을 통해 북한이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특수부대 파병을 결정하고, 이미 선발대 1500명이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 훈련하고 있으며, 향후 총 1만2000명 규모 병력을 추가 파병할 예정임이 공식 확인되었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북한 청년 1만2000명을 죽음의 전장으로 내몰 뿐 아니라 러시아의 불법적 우크라이나 침략에 가담한 것으로 한반도와 국제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이다.

최근 러·북 군사협력 강화는 동북아 안정뿐만 아니라 국제평화에도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다. 지난 6월, 김정은과 푸틴은 평양에서 가진 정상회담에서 ‘상호 군사원조’ 조항을 복원하고 러시아도 북한에 병력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 전략적인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여 비준을 앞두고 있다. 이는 향후 동북아에 대한 러시아의 군사적 개입 명분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북한의 침략전쟁에 러시아도 가담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이 전투병을 파병함으로써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불법 무력침략에 가담한 것을 규탄하고 이 같은 상황을 좌시하지 않고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대북제재 강화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을 분명히 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 국제법을 위반한 러시아의 침략전쟁에 가담하는 불법행위이며, 따라서 북한이 파병한 전투병력을 즉각적이고, 완전하고, 무조건적으로 러시아에서 철군시키고 추가 이송계획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러시아가 파병의 대가로 북한에 군사기술을 이전하는 오판을 저지른다면 국제사회의 전례없는 강력한 제재와 더불어 준엄한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이 서울 작전 지도를 펴놓고 물리력 사용을 공언하고 대남 오물풍선 테러, 무인기 침투, 미사일 도발을 자행하는 등 대한민국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는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한편, 이러한 행위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국제사회의 안정을 해치는 무모한 도발임을 분명히 밝히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4. 대한민국 국회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불법 침략 행위가 2년 넘게 지속되는 것에 우려를 표하며, 이와 관련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인도주의적 지원을 포함한 전방위적 평화 정착 노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
5.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러·북 군사협력 동향을 조기에 탐지하고, 굳건한 한미동맹과 확장억제,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견고히 함과 동시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IP4 파트너국과 함께 힘을 모아, 러·북의 군사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철통같이 지킬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6. 대한민국 국회는 국제평화를 지키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지지하며, 이와 관련 대북제재를 위한 다국적 이행 모니터링팀 (MSMT) 활동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이행과 강화를 위한 노력을 적극 지지해 나갈 것이다.

7. 대한민국 국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국가 안보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을 결의하며,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한 전방위적 외교 및 안보 협력에 동참할 것을 다짐한다.

제안이유

북한 김정은 정권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군사 지원을 점차 확대하고 있음. 최근 밝혀진 바에 따르면, 북한은 러시아에 막대한 포탄과 미사일을 공급했을 뿐만 아니라, 1,500여 명의 전투병을 러시아에 파병한 사실이 확인됨.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추가적으로 약 1만 2,000명의 병력을 파병할 계획이 있다는 전망이다. 이는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적 협력 강화를 넘어, 실질적인 전투병력이 투입되는 심각한 단계로 진입한 것임.

북한의 전투병 파병은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로,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 행

위임. 러시아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침공에 동참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공고한 질서를 무너뜨리며, 한반도의 안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또한, 이러한 군사적 협력은 러시아와 북한이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에 따라 더욱 강화되고 있어,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임.

이에 북한이 전투병을 파병함으로써 러시아의 침략전쟁에 가담하는 것은 불법행위이며, 만약 러시아가 북한에 군사기술을 이전할 경우 이는 오히려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에 직면할 것임.

따라서,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의 전투병 파병을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이 즉각적으로 전투병 철수와 추가 파병 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함.

정부는 러·북의 군사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비태세를 갖추고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를 수호할 수 있는 다각적인 외교적, 군사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자 동 결의안을 제안함.

Ⅲ. 검토의견

김건위원이 대표발의한 「북한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 규탄 및 세계평화를 위한 국제협력 촉구 결의안」은 지난 10월 18일 국가정보원이 북한 특수부대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사실을 공식적으로 발표함에 따라 북한의 파병 전투병력의 철군 및 추가 이송 계획의 철회를 촉구하고, 러시아에 대해 파병의 대가로 북한에 군사기술을 이전하는 일이 없도록 경고하며, 우리 정부로 하여금 러·북의 군사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을 촉구하려는 것임.

2022년 2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동부 2개주¹⁾를 자치공화국으로 승인하고, 해당 지역 보호를 명분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였으며, 같은 해 10월, 우크라이나 남부 2개주²⁾까지 점령지를 확대하여 총 4개주를 러시아 영토로 병합하였음. 2023년 6월 우크라이나의 대반격에도 불구하고 수 개월간 전선이 교착상태를 유지하다가 2024년 5월 푸틴 대통령의 재선 이후 러시아는 북동부 전선을 압박하고 우크라이나 전역의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음. 우크라이나는 2024년 8월 접경지인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러시아 본토 내 지상 공격을 실시 중이나, 러시아의 반격에 직면한 상황임.

한편 러시아와 북한은 2023년 9월 보스토치니에서의 정상회담, 2024년 6월 평양 정상회담 및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 조약’ 체결 이래

1) 도네츠크, 루한스크

2) 헤르손, 자포리자

정상 간 수차례 축전을 교환하고, 다양한 분야의 고위 및 실무급 상호 방문이 이루어지는 등 양적, 질적 차원의 관계를 확대하고 있음. 특히 국방 분야에 있어서 북한은 2023년 8월 이래 컨테이너 13,000개 이상 분량의 포탄, 미사일, 대전차로켓 등 살상무기를 러시아에 지원³⁾하는 등 러시아와 북한 간 무기 거래가 지속되고 있음.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10월 17일 EU 정상회의 기자회견에서 북한군 1만 명의 러시아 파병 준비를 주장하였고, 바로 다음날인 10월 18일 우리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러시아에 12,000명 파병을 결정하였고, 특수부대 1,500명이 블라디보스톡에 도착하여 훈련을 마치는 대로 전선에 투입할 전망임을 발표하였음.⁴⁾

이에 존 커비 백악관 NSC 소통보좌관은 지난 10월 21일 “우리는 이러한 (북한군 파병 관련) 보도를 계속 조사하고 있으며, 동맹 및 파트너들과도 이야기하고 있다”며, “며칠 내로 입장을 밝히겠다”고 언급함. 같은 날 영국 외교장관은 한영 외교장관 전략대화에서 러시아와 북한 간 정치·경제·군사 협력의 전방위적 확대가 군사물자 이동을 넘어 북한의 실질적 파병으로까지 이어진 현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며 우려를 표명하였고, 다음날 한영 외교장관은 이례적으로 러북 협력에 관한 별도 공동 성명을 발표하였음. EU 외교안보담당 대변인은 10월 21일 “북한에서 병력이 러시아로 이동한다는 보도가 확인되면 한 단계 다른 차원의 긴장 고조이자 국제규범과 법을 무시하는 러북 간 협력 심

3) 2024. 10. 18. 국가정보원

4) “국정원, 북한 특수부대 러-우크라 전쟁 참전 확인”(2024.10.18, 국정원 보도자료)

화를 의미할 것”이라 지적하였고, 프랑스 외무장관은 10월 19일 “북한이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군대를 파견한 것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는 위기를 심화시키는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언급함.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0월 21일 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 위기에 대한 중국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하다”며, “각 당사자가 국면 완화를 추동하고 정치적 해결에 힘쓰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함.

이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는 “대량의 군사무기를 러시아에 지원해 온 북한이 러시아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파병까지 하기에 이른 것은 우리나라는 물론 국제사회에 대한 중대한 안보 위협이자 북한과의 일체의 군사협력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다는 입장임.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 인프라, 보건의료,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의 재건을 도울 예정임.⁵⁾

동 결의안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북한군 파병을 규탄하고, 한반도와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북한으로의 군사기술 이전 가능성을 우려하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호를 위한 최선의 조치를 다할 것을 대한민국 정부에 주문한다는 점에서 시의성이 높고 그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보임.

5) 우리 지원 규모: ('22~'23) 1.5억불, ('24) 4억불, ('25~'29) EDCF 20억불

- 2024년 지원 내역: 국제금융기구(WB, EBRD)를 통한 지원 1억불, 인도적 지원 2억불(지뢰제거장비 등 현물 1억불, 식량안보, 난민지원 등 분야 국제기구 1억불), EDCF 1억불('23년 공약 후 집행 이월) (2024. 10. 22. 외교부 제출 자료)

문 의 처
02) 6788-5263